

조직 개편 금감원, 소비자 보호·혁신금융 지원 대폭 강화

기사입력 2020-01-24 04:07

DLF 사태 등 재발 방지 차원... 금소처, 피해 예방·권익 보호



금융감독원이 23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혁신금융 지원을 뼈대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가 벌어진 파생결합펀드(DLF) 사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르면서 어느 때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소비자 피해 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 부문으로 확대·재편했다"고 설명했다. 금소처는 기존 6개 부서·26개 팀에서 13개 부서·40개 팀으로 조직이 커진다. 소비자 부문이 피해 예방(사전적)과 권익 보호(사후적)로 나뉘면서 부원장보 자리도 하나 늘어난다. 8인 부원장보 체제가 9인 체제로 확대되는 셈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 부문은 소비자 보호 관련 총괄·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모집·판매, 광고·공시 등 전반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갖는다. 7개 부서에 19개 팀이 배치된다. 소비자 권익

보호 부문은 6개 부서에 21개 팀으로 꾸려졌다. 주요 민원·분쟁에 대해 현장 조사 및 합동 검사 기능까지 갖추게 됐다. 윤석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추진 등 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 속에서 여러 금융권역에 걸친 고위험 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혁신금융 지원 기능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국에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섭테크(SupTech·IT기술을 이용한 금융감독) 혁신팀'을 신설했다. 금융회사의 정보 기술(IT) 부문 감독·검사를 총괄하는 IT·핀테크 전략국에는 레그테크(RegTech) 지원 기능이 더해졌다. 레그테크는 IT 기술을 활용해 금융규제 준수 관련 업무를 자동화·효율화하는 기법이다.

이외에도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업 감독·검사 조직을 확충했다.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국제국으로 통합하고, 국내 금융사의 신남방국가 진출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신남방진출지원반)도 신설한다. 이번 개편으로 금감원 조직 편제는 61개 부서·37국 24실에서 62개 부서·40국 22실로 바뀌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국민일보 채널 구독하기]

[취향저격 뉴스는 여기] [의뢰하세요 취재대행소 뱅]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5&aid=0001281502>
